

신아세아질서 속에서의 한·몽관계

金英秀

- I. 머리말
- II. 동북아의 특성과 새 질서 모색
- III. 한·몽관계의 현황과 협력과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즉, 세계질서는 이념의 대결이 종식된 가운데 소지역이나 광역지역을 단위로 해서 협력권을 형성하고 있거나 새로운 협력권 형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협력의 지역화 또는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WTO체제 출범 과정에 잘 나타나 있듯이 협력과 경쟁, 개방과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몽골 사회과학원 동양학연구소 공동주최로 1995년 7월 19일 Ulaanbaatar에서 열린 제 3차 한·몽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임.

보호의 양면성을 띄면서 세계 경제질서의 단일화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 양대 이념의 힘겨루기가 퇴색하면서 실리추구,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힘의 대결구도를 기초로 하여 세계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세계질서 속에서 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대의명분 아래 인류 공동발전과 공공이익을 꾀하면서도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특성을 갖고 배타적,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세계질서는 이념전쟁이 아닌 무역전쟁 또는 경제전쟁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중심이 된 양극체제에 근거한 냉전구조가 붕괴됨에 따라 세계질서의 하부체제로서 동북아 질서 또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아직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지속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냉전이후시대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와 냉전적 대립과 갈등구조 아래서 형성된 교류장애 때문에 지금까지 새로운 협력관계 구도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냉전적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내국가들간의 협력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복잡하고 상호모순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 글의 연구목적이다.

II. 동북아의 특성과 새 질서 모색

동북아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갈리는 말레이시아반도 서안을 기준으로 한 동경 98도선에 의해 아시아를 동·서로 나누고, 북회귀선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아시아를 4등분할 때,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지리학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동북아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지역은 지리적 구분에서의 동아시아에 포함되는 지역이다.¹⁾ 즉 이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 동부(대만, 홍콩 포함), 시베리아 동부 및 몽골이다.

탈냉전적 세계질서의 재편과정과 함께 이 지역의 전통적 세력균형도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수립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점증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지역주의 경향에 의해 새로운 이익균형이 조성되면서 기존의 대결과 갈등양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결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흔히 동북아 지역의 역내국가들은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탈냉전 이후 이른바 「신동북아시아」, 또는 「신아세아질서」라는 용어를 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면서 쓰고 있다. 즉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고,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경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역내 국가들간의 이념적 장벽만 무너

1) 지리학적으로 아시아는 자연과 인문을 고려하여 북부아시아(시베리아), 중앙아시아(내륙아시아), 동아시아(중국대륙, 몽골, 한반도 및 일본열도), 동남아시아(인도차이나반도, 말레이제도), 남부아시아(인도대륙), 서남아시아(중동)의 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지게 되면 폭넓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큰 어려움 없이 문화적 차원의 지역협력 체제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관계를 확장시켜 왔으며, 특히 경제적 교류는 문화적 상호교류와 함께 이념적, 정치적 노선을 초월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새 질서 수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소련·중국과의 수교, 중국과 대만, 홍콩관계의 변화, 중국·몽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노력, 두만강지역 발전전망 등이 그동안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예상의 이면에는 동북아의 새 질서를 쉽게 형성할 수 없게 만드는 또다른 동북아의 실체와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지역기구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지역 국가들 상호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독 이 지역만 공식적인 지역기구가 없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마디로 동북아에는 「합의된 안정질서」로서의 평화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²⁾ 이 점이 유럽 및 대서양지역과 다른 면이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과 태평양 연안국가들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하게 가시화된 것이 없었던 것은, 탈냉전시대 공통의 적이 부재하고 뚜렷한 안보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심점이 되어 구상을 실현시킬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³⁾

2) 이상우, "시민주도의 동북아 평화질서 구상,"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신아세아』, 제 2호(1994년 10월), p.46.

3) Robert A. Scalapino,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and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jor Powers and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5-26, 1995, Seoul, Korea.

즉 동북아는 아직까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행보를 같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협력에 의해 형성될 이익에 대한 인식의 합의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공동협력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에 대한 분배원칙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단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해 기존의 쌍무적 관계에 변화가 일게 됨으로써 새로운 질서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특성은 무엇보다 20세기 초기의 사건들이 2차대전 이후의 정치적 분열과 연결되어 지역구조 형성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쌓은 것에 연유한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지금까지도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유산을 남기고 있고, 남·북한과 중국-대만 등의 분단국가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의 사회주의체제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결과 동북아의 새 질서는 안정과 불안정의 양면성 속에서,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확연히 대립된 상황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⁴⁾

한편, <표-1>을 보다시피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경제규모 및 발전의 수준차도 심하다. 즉 이 지역에는 선진국인 일본, 신흥공업국인 한국,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개방 추진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 체제전환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사회주의권의 약화와 주체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체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 그리고 오랜동안의 소련의존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몽골 등, 국가의 당면목표도 다르고 국가발전 양상도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으

4) 김동성, "동북아의 신질서와 '적극적 평화': 다자간 협력의 전개," 일민 윤형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세계정치의 쟁점과 이해』 (서울: 박영사, 1993), pp.137~139.

나, 사회주의체제하의 관행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어 다자간 경제협력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동북아 국가 대부분은 미국과 같은 역외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가 커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

<표-1> 동북아 국가의 경제규모 비교 (1993년 현재)

	단위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계	대세계 비중(%)
국토 면적	만Km ²	9.9	156.7	960.0	1,707.5	37.8	12.3	2884.2	21.1
인구 규모	백만 명	44.6	2.25	1,185.5	149.3	124.8	22.6	1527.2	27.4
GNP	십억 달러	328.7	2.1 ^a	545.0	333.9	4,254.9	21.1	5484.2	18.9 ^b
1인당 GNP	달러	7,466	223	490	2,240	34,104	943	-	-
경제 성장률	%	5.5	2.1	13.4	-12.0	0.1	-7.6	-	-
무역	십억 달러	166.0	0.7224	195.8	70.1	601.6	2.6	1036.8	13.9
수출	십억 달러	82.2	0.3609	91.8	43.1	360.9	1.0	579.4	15.9
수입	십억 달러	83.8	0.3615	104.0	27.0	240.7	1.6	457.5	12.1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지역 현황: 몽골」, (1995.5).

아시아經濟研究所, 『아시아動向年報』, (1994.6).

주: ^a는 GDP를 나타낸 수치이며, ^b는 몽골을 제외한 수치임.

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역내국가들간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쉽게 도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역내 상호무역의존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의 경우 역내무역 의존도

가 1991년 기준으로 60%를 넘고 있고, 북미국가들도 40%에 달하는 역내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동북아 지역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5%를 겨우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경제적 성격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 지역별 역내 무역의존도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동북아	11.4	13.6	11.9	14.7	14.5	15.8
유 럽	50.5	50.3	52.4	54.8	60.9	60.7
북 미	40.0	36.6	33.1	38.7	39.3	39.0
동남아	16.4	14.2	16.6	18.3	16.7	17.5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김규륜,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29에서 재인용.

군비확장 경향 또한 동북아 지역의 특성이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밝힌 통계에 의하면, 동서냉전의 해소로 전세계의 군비지출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이 지역 국가들은 각기 방위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에 존속하고 있는 분단 국가들은 군비축소를 보다 어렵게 하는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군비확장과 장비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냉전 종식이 야기한 힘의 공백으로 인해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내 상호경쟁공간에 무기통제나 신뢰구축

5) SIPRI, *SIPRI Yearbook 1994: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s* (Stockholm: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271~275.

을 제도화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역내국가들의 방위증강 의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⁶⁾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역내국가들과 관련강대국들은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연대적 지역단위로 발전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문화적 경험의 공유와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국가간 관계정상화라는 사실만으로 전쟁과 침략으로 얼룩진 정치·군사적 갈등의 역사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 및 경제규모의 차가 심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조건, 그리고 한번도 통합경험이 없었던 역사적 사실 등이 이 지역에 보편적 정치·경제공동체를 출현시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III. 한·몽관계의 현황과 협력과제

이런 동북아의 상황 속에서 한국과 몽골은 현재 어떤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양국간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양국의 협력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한·몽관계의 현황

러시아 혁명 이후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했던 몽골은

6)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26~38.

개혁·개방정책인 「시네치열」(개혁)과 「오드데흐」(개방)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탈사회주의를 추구한 국가라는 기록을 또다시 남기게 되었다.

한·몽관계는 1990년 3월 26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바로 탈냉전의 산물인 동시에 「신아세아질서」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증대되어 왔는데, 1991년 10월 오치르바트(Punsalmaagiyn Ochirbat) 현 몽골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표-3>을 보듯이 양국간 인적 교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85년에 시작된 양국의 교역도 무역·투자 보장협정(1991.3)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1992.4) 이후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4> 참조)

<표-3> 양국간인적교류현황

(단위: 명)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방 몽	7	23	16	37	192
방 한	157	285	364	502	2,872

출처: 외무부, 「몽골개황」(1995.5).

<표-4> 대몽골 무역 현황

(단위: 천 달러)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수 출	515	5,306	8,795	3,533	18,700
수 입	2,191	426	1,810	3,980	4,844
무역수지	-1,676	4,880	6,985	-447	13,856

출처: 외무부, 「몽골개황」(199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시아 현황: 몽골」(1995.5).

<표-5> 대몽골 무상원조 및 협력사업 현황

구분	1992	1993	1994	1995
프로젝트 사업	20만 달러	3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연수생 초청	15명	18명	24명	40명
전문가 파견	1명	3명	4명	4명
청년봉사단 파견	7명	11명	4명	13명
국제협력의사 파견				1명

출처: 외무부, 「몽골개황」, (199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시아 지역 현황: 몽골」, (1995.5).

한편, 한국은 개발원조의 일환으로 1992년 8월 주사기 공장건설을 위한 520만 달러의 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하여 1995년 2월 현재 일부가 집행되었으며, 현재 South Gobi성의 Dalanzadgad 화력 발전소 건설자금 800만 달러의 지원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1990년부터 시작된 무상협력사업은 1994년 말 현재 지원대상국 중 금액기준으로 8위를 기록하여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청년해외봉사단(KYV) 파견, 국제협력의사 파견 및 기자재 공여 등이 실행되고 있다.(<표-5> 참조)

2. 한·몽의 협력과제

이상의 현황을 볼 때, 양국의 관계는 이제 교류의 첫 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의미있는 한·몽관계를 위해 동북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에서의 공조체제 확립

냉전체제의 종식과 개방의 물결을 타고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대

한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UNDP 주도하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다. 이 사업은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다른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정부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으나, 계획의 실행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접경 3국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재원조달문제가 부상하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의 입장에서 TRADP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두만강지역이 개발되어 몽골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로가 건설되면, 동해 연안의 항구를 이용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수출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몽골의 경제적, 전략적 위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몽골은 TRADP를 거국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왔다.⁷⁾

한편, 한국은 TRADP가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 적극 참여해 왔다.

따라서 비접경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몽골과 한국은 다자간 논의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TRADP가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지해 온 양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TRADP에서의 공조체제 유지방안은 TRADP 자체의 성격상, 그리고 동북아의 특성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7) M. Dugersuren, "Changing Mongolia in a new environment,"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No.1), p.21.

2) 「한·몽 문화센터」를 통한 교류의 활성화

이와는 달리 양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방안으로서 「한·몽 문화센터」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한·몽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북아의 새 질서 수립에도 기여하는 방안이다.

한국과 몽골은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의 생김새, 말의 꾸밈새, 신화의 즐거리들도 매우 비슷하며, 무당의 믿음이나 의식도 서로 닮았다. 이는 과거 양국 구성원들의 의식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공속성이 이데올로기의 출현으로 인해 거의 한 세기동안 완전히 단절된 채 격리된 공간 속에 갇혀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불변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양국 구성원간에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적대적 감정이 형성될 역사적 경험을 거의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한·몽 문화센터」를 통한 교류의 활성화는 큰 어려움 없이 양국 구성원간의 문화적 친밀감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인해 경직된 사고방식을 전환하면서 공통의 문제의식,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의 특성상 역내국가간의 협상에 의존해 동북아의 평화로운 새 질서를 모색하기보다는, 국경을 넘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시민적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를 향한 상호교육과 공동대화 및 노력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필요하다. 지금 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한·몽 문화센터」를 창설해 양국관계 활성화 뿐 아니라 동북아의 새 질서 모색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IV. 맺음말

최근 「평화연구」는 주로 「평화의 조건」에 연구의 초점을 두면서 진행되고 있다. 즉, 보다 정의롭고 안정된 세계질서를 위한 조건의 창출을 위해 국제체제가 어떤 과정, 구조, 그리고 메카니즘을 개발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탄생했다.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의 하나인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al Approach)은 동북아에서의 「합의된 안정질서」로서의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 즉, 이 접근법은 진정한 세계평화란 전인류적 차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문화적 변혁과 의식의 개혁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체계와 창조적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변혁적 접근법」은 평화를 위한 교육학적 노력을 설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몽 문화센터」를 통한 한·몽협력 방안도 바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접근법의 일환이다. 「한·몽 문화센터」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결핍되어 있는 「북방적 사유」가 심어지게 되고, 몽골 국민에게 부족한 「남방적 사유」가 함양되면, 양국 상호간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무리없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학적 노력에 동북아 국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새 질서인 「PAX ULBESETO」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성, “동북아의 신질서와 ‘적극적 평화’: 다자간 협력의 전개,”
 일민 윤형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세계정치
 의 쟁점과 이해』, 서울: 박영사, 1993.
- 대의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지역 현황: 몽골」, 1995.
- 외무부, 「몽골개황」, 1995.
- 이상우, “시민주도의 동북아 평화질서 구상,”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신아세아』, 제2호 (1994년 10월).
-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Batbayar, T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No.1).
- Dugersuren, M. “Changing Mongolia in a New Environment,”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No.1).
- Scalapino, Robert A.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and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jor
 Powers and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5-26, 1995, Seoul, Korea.
- SIPRI, *SIPRI Yearbook 1994: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s*, Stockholm: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アジア經濟研究所, 『アジア動向年報』 (1994.6).